

“전주 서부권에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을”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전주 서부권 노인 복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숙 의원은 1일 제 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해가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인구 가장 과밀하게 집중된 서부권에 노인 복합복지관이 없다”며 서부권 노인 복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본회의서 촉구

인구 약 187만명 중 노인인구는 33만 2000명으로 17.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도 노인인구가 7만 8000명으로 노인인구비율도 12%로 고령사회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2016년 현재 전주시에는 7개의 노인 복지관과 3개의 분관이 있다. 7곳의 노인복지관은 완산구 4곳, 덕진구 3곳에 위치하고 있다. 7개 노인복지관과 3개 분관에 등록된 이용자는 현재 5만 762명입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관 하루 이용자는 4500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이 없거나 접근이 힘든 지역은 효자3동, 효자4동,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호성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 문화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균형적인 노인복지 혜택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가 집중된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1만6000여명으로, 효자동 노인 인구는 완산구 전체 노인의 24.6%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효자동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만한 노인복지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서부권

전주시, 도시농업 확대 조성

전주시가 시민들 스스로 텃밭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도시농업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도시농업 활동 참여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농업 확대는 전주시가 농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전주푸드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농업 활성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등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도시농업 활동공간인 도시 텃밭과 학교텃밭을 늘려 나가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14개소에 불과하던 전주지역 도시농업 활동공간은 올해 도시텃밭 10개소와 학교텃밭 20개소, 교육농장 2개소 등 총 32개소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이곳에서는 현재 총 700여세대가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작물을 직접 기르면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주지역 20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텃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연계한 텃밭 체험활동을 통해 농업과 건강한 식습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고 있다. /김영재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실질피해보상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 노력 강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만 노력 강도 행각을 벌이고 여주인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근산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도록 하고, 신씨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김영재 기자

고용부 전주지청, 체불임금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13일까지 2주동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처리하고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게 된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또한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저리용자를 통해 체불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를 추진한다.

문의 사항은 전주고용노동지청(☎ 063-240-3402)에 연락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김윤철 시의원 “친환경차 도입·태양에너지 보급 확대를”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대기환경오염 차단을 위해 친환경차량 도입과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김윤철 시의원(중앙, 노송, 풍남동)은 1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된 상황



에서 친환경에너지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의회 때부터 시정질문 등을 통해 태양광 집열판 설치 확대 방안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강조해왔는데, 전주시는 소극적 행정만 끼고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여파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사회적 과제

로 떠오르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토포즈 솔라팜’이라는 세계에서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조성, 태양에너지를 활용 5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16만 가구에 전기보급을 충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주 시도 일찍이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 활용했다면 올 여름 폭염으로 일반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전주시의 근시안적이고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학생 사회복지장학금 지원

전주시가 사회복지장학금 지급으로 품행이 단정하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돌보고 나섰다.

전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00명을 선발해 2016년도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으로 총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장학금은 사회보장기금의 이자수입금을 활용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01년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지속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수급자 가정의 고교생 100명에게는 각각 1인당 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성수식품 관리 강화

9일까지 위생실태 집중 점검

전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성수식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한옥마을사업소와 완산·덕진구청 등 민·관 합동으로 7개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식품 수거 검사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여과 터미널, 관광지 주변 등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위반 및 불량원료 사용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주요 점검내용은 △성수식품(한과류, 고사리, 도라지, 식용유지류 등) 수거검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행위,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 등)·종사자 손 등 세균수치 오염도 검사 등 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과 종사자 위생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 후 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 점검뿐 아니라 식중독 예방 비상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주를 방문한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